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22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복기왕 · 김남근 · 김문수
장종태 · 김우영 · 이강일
윤종오 · 허 영 · 박홍배
박민규 · 김영환 · 황명선
이정현 · 민형배 · 김영배
염태영 · 조계원 · 전진숙
안도걸 · 최혁진 · 문진석
송재봉 · 강준현 · 김기표
이연희 · 김 현 · 주철현
이수진 · 김종민 · 김정호
이성윤 · 김 윤 · 김남희
전종덕 · 이인영 · 소병훈
김태년 · 민병덕 · 진선미
안태준 · 윤준병 · 어기구
김태선 · 김성희 · 이재관
윤건영 · 이정문 · 김원이
박희승 · 서영교 · 정태호
김교홍 · 박홍근 · 맹성규
김현정 · 이건태 · 민홍철
임호선 · 송옥주 · 박범계
박 정 · 남인순 의원
(62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서비스와 사적서비스 영역 사이에는 소외된 경제영역이 존재하며,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소외된 경제영역을 공공영역이 복지로 부담하기에는 막대한 정부 재원이 필요하고, 사적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서비스비용이 높아져 소비자가 감당할 수 없음.

이 부분을 채워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취약계층을 시장경제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연대경제이나 그 동안 각 영역간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태임.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확산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연대경제의 기본원칙으로 ① 사적 이익 창출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 우선시, ② 국가 등으로부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운영, ④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우선 사용, ⑤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부조와 협력 강화 및 지역사회발전의 기여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사회연대경제”를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 자. 사회연대경제의 기본계획과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정책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 차.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 카.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6조).
- 타.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 파.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사업협력 및 활동 교류 등을 위하여 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 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의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

원을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재화나 용역 구매 시 사회연대경제 조직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19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이를 사적 자본의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우선시하여야 한다.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3항, 제14조제7항, 제16조제8항 및 제22조제3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익을 해당 조직과 지역공동체 발

전을 위하여 재투자하며, 이익의 사용과 배분은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직 간에 상호부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

국연합회

- 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 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같은 법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 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출자회사 및 같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를 하는 수협은행은 제외한다.
- 자.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차.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염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염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

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너. 제3호에서 정한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더. 제18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

러. 그 밖에 제2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

3.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민간조직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적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교육·홍보에 힘써야 한다.

제5조(사회연대경제조직의 책무)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제2조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자생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제품의 생산 및 품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노동·인권·환경·복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연대경제 발전,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회연대경제 발전,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연대경제 현황 및 여건, 전망
2.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5.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구축과 민·관 협력 강화방안

7.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육성방안
 8.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9. 사회연대경제 분야별·업종별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방안
 10.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의 통합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11.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13.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1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이하 “시·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제1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과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부문별, 시·도별 실적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조직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혜택 부여나 포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추진체계

제13조(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① 사회연대경제의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의 정책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9.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 중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이 되도록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국회의 교섭단체를 이루는 정당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제2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두

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 제3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처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의 정책과 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해당 지역의 사회연대경제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한국사회연대경제원의 설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연대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경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경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2.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지원
3.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4. 사회연대경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사회연대경제 전달체계 구축·운영과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육성사업
6.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교류·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교육, 컨설팅 및 홍보
8. 사회연대경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원의 운영·감독을 총괄한다.

⑦ 경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경제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경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경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연대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경제원의 정관, 이사회·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경제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이하 “시·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 지원센터는 민·관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 민·관공동운영, 민간 위탁 등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하

게 운영하도록 하며, 민간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시·도 지원센터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지원센터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도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의 설립) 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사업협력 및 활동 교류 등을 위하여 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 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연합조직(이하 “연합조직”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합조직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연합조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판로개척, 재원조달,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공동체 개발, 지역기반 확충, 인재육성 등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④ 연합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 단위의 다양한 연합조직의 개발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공동사업, 공제기금 조성, 공유자산 축적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조직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업무 수

행을 위한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연합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제1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물”이라 한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물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조세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연대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연대경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2.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교류협력
3.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4.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지역클러스터 조성 및 판로 구축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발적인

조직통합 또는 경영통합을 하려는 경우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상
· 행정상 · 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24조(국제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 ·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류 · 협력과 해외진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5조(벌칙)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16조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사회연대경제원의 설립 준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경제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회는 경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원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